

양극화, 그리고 거버넌스



김대길
한국해비타트 천인/
아산지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법적·정치적 평등권을 갖는다는 의미로써 지위고하를 떠나 위법에 대한 상응한 처벌과 함께 선거에서 유권사로서 1인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권은 법과 정치의 범주에만 국한된 뿐, 그 밖의 영역에는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특히 경제영역이 그러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며 영리 추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증식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계급과 차이가 파생되며, 무한경쟁 하의 특정 계층의 자본집중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polarization)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심각한 사회·경제문제의 원흉으로 대두되었다.

최근, 대선 정국을 맞은 한국사회는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각 후보 진영이 쏟아내는 다양한 정책비전과 어젠더들의 혼전 양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 간의 첨예한 이념 대립이 상존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996년, 56%이던 중산층 비율은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에는 44%로 감소했고 빈곤층은 11%에서 20%, 고소득층은 20%에서 25%로 증가했다.

수치대로라면 친 서민 정부를 자처한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의 삶은 궁핍해져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는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의 부富力의 증가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경기진작

으로 이어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트리플 다윈과 함께 선택과 집중, 불균형 성장 전략, 비교우위 이론 등은 격차를 줄이는 것에 무심하거나, 격차를 방임 또는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는 앞으로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심화된 양극화를 지적한다. 국내 일자리의 99%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내수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부실은 곧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내수 부진을 초래하며 성장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기반이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심화된 양극화는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낳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부재로 인해 사회 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의 분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 통합을 이루는 해법은 무엇일까?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일종의 반사회적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거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국가권력의 자본 견제력도 약화되었다.

이런 실성에서 인간과 지구적 자본의 탐욕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화와 성숙을 통한 거버넌스가 시대적 과제로 요청된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19세기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질적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다수의 뜻대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다수라는 양적인 기준만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의문이다.

인과적 순서를 떠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한 성찰적 합의체제의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도전으로서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과 새로운 인간육구의 분출에 따른 저항으로 규정된다. 헤게모니와 기득권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구조화된 제도 하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틀 속에 억압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회복하는 일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의의 실현이다. 이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강화된 힘의 바탕 위에서 쓸모없는 힘겨루기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

의사결정 방식을 제도화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상생하고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긴장된 균형 또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겠다.

이제 세계화의 물결은 경제 지상주의와 시장 중심의 관계를 뛰어넘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사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 각 섹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협치의 관계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정당성 부여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중대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시민사회 조직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혁이 요구된다.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돈과 재화의 흐름flow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계급구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 세상에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며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가 있다. 지식의 높낮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하구조의 양극화는 흐름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많이 배운 자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돕는 흐름의 미학은 그 어떤 제도적 방안보다도 양극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등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으로 여겨진다.

모두가 똑같이 아무런 나눔과 소통이 없는 사회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라는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에도 흐름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로의 벽을 허물고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서로의 공과功過를 면밀히 따져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용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 치는 경향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중용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의 행복,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상호 간의 올바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수 있겠다.